

보도 일시	2022. 8. 17.(수) 12:00		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	책임자	과장 김창남 (044-205-3981)
		담당자	사무관 이범수 (044-205-399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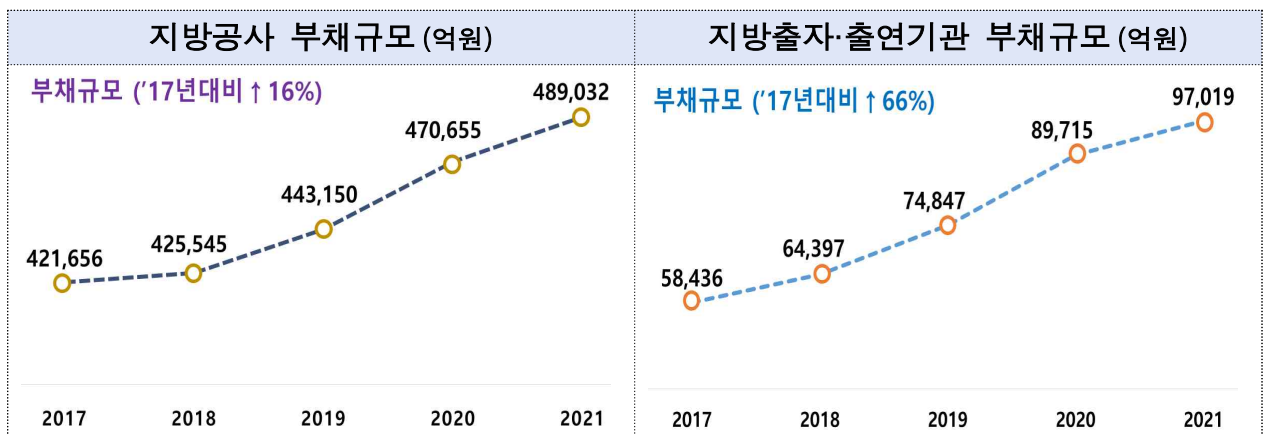
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중점관리 추진 -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, 부채비율 200% 이상 기관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·운영은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(7.27. 발표)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*인 ‘재무건전성 강화’ 방안의 일환이다.

* ① 구조개혁 추진, ② 재무건전성 강화, ③ 민간협력 강화, ④ 관리체계 개편

<부채중점관리 필요성>

- 지방공공기관* 전체 부채비율**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,
 - * 지방공기업(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), 지방출자출연기관(출자기관, 출연기관)
 - ** 부채비율('21년 결산기준): 지방공기업 전체 33.8%, 지방출자출연기관 전체 64.4%
- 지방공사(도시철도·도시개발공사 등)와 지방출자·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.



<개선방안>

□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%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, 지방출자·출연기관 118개 등이다.

구 분	현 행	개 선
지방공기업	▶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* 부채 1천억 원 이상, 부채비율 200% 이상	▶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(좌동) * 부채 1천억 원, 부채비율 200% 이상 ▶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, 계획·실적 공시 등 관리 강화 (신설)
지방출자·출연기관	-	▶ 부채중점관리기관 신규 지정 (신설) * 부채 1천억 원, 부채비율 200% 이상 ▶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, 계획·실적 공시 등 관리 강화 (신설)

□ (지방공기업)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- 앞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년도 재무·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.
- 아울러, 지방자치단체의 협의·승인을 거쳐,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*하도록 할 예정이다.

* 해당기관 누리집,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클린아이) 등

□ (지방출자·출연기관)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·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.

-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·부채관리계획 수립,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.

* 그동안 지방출자·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

<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, 부채비율 200% 이상 지방출자·출연기관 현황(5년) >

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95개	99개	109개	116개	118개

<향후 추진일정>

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,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·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.

-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금리인상,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”면서,
- “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 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